

월간

나라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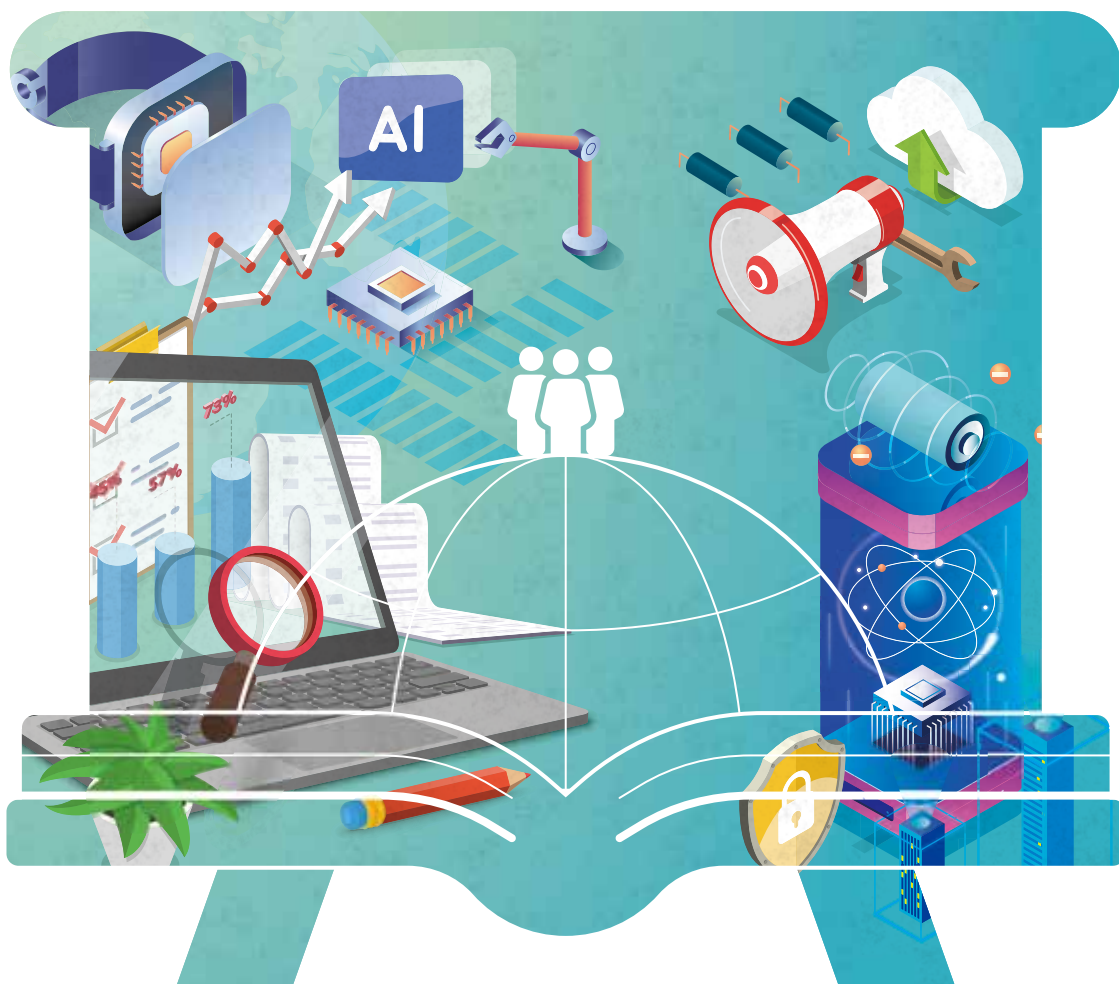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5

2025 MAY

VOL. 101

나라 안팎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Theme Story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국발 관세 충격에서 기업을 지원하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652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어백플러스 | 02-2672-1535



재정 INSIGHT

- 04 특별기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 08 이달의 재정 VOCA
추가경정예산
- 10 재정칼럼
AI생태계 혁신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강주영 아주대학교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교수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재정 NOW

- 22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3월 기준 재정동향
- 24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 34 재정 캘린더

재정 NAVIGATION

- 36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그림 속에 담긴 풍요와 번영
- 42 내가 써온 한국재정사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와 기대
- 48 재정이 MONEY
미국 주도 인공지능 생태계,
한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
- 52 플랫폼이 된 도시
바르셀로나,
도시계획 플랫폼이 도시의 운명을 바꾸다
: 변방의 시골 도시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 60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FIS 재정

- 62 FIS 재정 알리미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 64 재정원 소식
- 66 애독자 코너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1 추경 편성 배경 및 추경 규모

최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산불이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전례 없는 통상 충격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4월 3일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관세 갈등이 확산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도 25%의 상호 관세가 발표된 바 있다. 비록 4월 9일에 90일 간의 유예 조치가 발표되었으나,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IMF와 KDI는 각각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며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 더딜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서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AI 지원 등에 중점을 둔 12.2조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보다 1.6조 원 증가한 13.8조 원 규모로 5월 1일 확정되었다. 금번 추경은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성이 높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추경예산안은 재해·재난대응 3.3조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5조 원, 민생 지원 5.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전체 모습 |

(단위: 조 원)

구분	정부안	국회 확정	증감
합계	+12.2	+13.8	+1.6
① 재해·재난 대응	+3.2	+3.3	+0.1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	1.4	+0.03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9	1.9	+0.09

구분	정부안	국회 확정	증감
② 통상 및 AI 지원	+4.4	+4.5	+0.1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2.1	+0.01
▶ AI 생태계 혁신	1.8	1.9	+0.1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0.5	+0.02
③ 민생 지원	+4.3	+5.1	+0.8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	2.6	-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2.0	+0.4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0.6	+0.4
④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0.2	+1.0	+0.9
▶ 건설경기 보강	-	0.8	+0.8
▶ APEC 정상회의 등	0.2	0.2	+0.04
⑤ 국고채 이자 등	-	△0.2	△0.2

이번 추경의 결과 2025년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3조 원 증가한 652.8조 원, 총지출은 13.8조 원 증가한 687.1조 원이 되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4조 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적자폭이 12.5조 원 증가했으며, 국가채무는 7.4조 원 증가한 1,280.8조 원이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정 총량 |

(단위: 조 원)

	2024년 본예산	2025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국회 확정(C)	본예산 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 총수입 (증가율)	612.2 (△2.2)	651.6 (6.4)	652.8 (6.6)	652.8 (6.6)	+1.3	-
■ 총지출 (증가율)	656.6 (2.8)	673.3 (2.5)	685.5 (4.4)	687.1 (4.6)	+13.8	+1.6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44.4 (△1.8)	△21.7 (△0.8)	△32.6 (△1.2)	△34.3 (△1.3)	△12.5 △0.5%p	△1.6 △0.1%p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91.6 (△3.6)	△73.9 (△2.8)	△84.7 (△3.2)	△86.4 (△3.3)	△12.5 △0.5%p	△1.6 △0.1%p
• 국가채무 (GDP 대비, %)	1,195.8 (47.4)	1,273.3 (48.1)	1,279.4 (48.4)	1,280.8 (48.4)	7.4 +0.3%p	1.4 +0.1%p

2 재해·재난 대응

먼저, 금번 추경은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3.3조 원을 투입한다. 우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4조 원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인 산불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0.9조 원을 보강한다. 한편, 산불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전과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기존 2천~3천6백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피해 마을 5개 소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복구·재생사업을 신설한다. 피해 농민의 영농 재개를 위해 임대농기계 444대의 구입을 지원하고,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작물 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진압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1.9조 원을 투자한다. 산불에 대해서는 사전 탐지와 산불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AI 감시카메라, 헬기, 진화차 등 인프라를 보강한다. 이 외에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항 안전시설과 하수관로·도로 등 노후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3 통상 리스크 및 AI 경쟁력 제고

금번 추경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5조 원 규모의 투자도 담겼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커진 만큼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15조 원, 관세 피해 중소·중견 기업 특례보증, 보증보험 등 총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관세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컨설팅을 포함한 4개 분야의 50여 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촘촘히 대응한다.

다음으로,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1.9조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먼저, 세계 최고 LLM의 학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를 뒷받침한다. 세계를 선도할 K-LLM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GPU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에게 인건비·체재비·연구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 인재 양성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투자도 0.5조 원 확대한다. 용인·평택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8조 원) 기업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도 0.1조 원 규모로 신설한다.

4 민생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영세 사업자 매출 확충, 취약계층 생계 보호 등 민생 안정 지원 규모도 5.1조 원 확대한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에 2.6조 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수준의 크레딧을 새롭게 지원한다. 더불어 소상공인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0.8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 신용카드도 발급한다. 줄곧 높은 경영 비용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영세 사업자의 매출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 발생 효과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역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도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서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0.6조 원을 투자한다. 서민층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0.1조 원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구간별 한도액도 차등적으로 인상한다. 한편,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약 0.2조 원 추가 공급하여 지원 인원을 12.3만 명에서 19.3만 명으로 확대한다.

5 맺음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 가지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보강이다. 동시에 금번 추경은 국회와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예산이 현장에서 지체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경제의 구조적 회복과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균형 있게 병행하여, 재정이 제때, 제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달의 재정 VOCA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이란, 이미 국회를 통해 성립된 당초 예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새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예산입니다. 주로 예상치 못한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제 상황 또는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편성됩니다.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의 차이는?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연간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기존 예산을 수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본예산은 연간 재정운용의 기본 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예산입니다. 자연재해, 경기침체, 법률에 따른 새로운 지출 의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법령 및 요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제1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 제2호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의 차이

구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	회계연도 개시 전(전년도 9월 제출)	회계연도 중(필요시 수시 편성)
편성목적	정부의 연간계획 된 사업 운영 및 정책 집행	예상치 못한 상황 대응 및 본예산의 보완
심의기관	국회	국회
편성기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이 발생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목적에 따라 편성되고 그 유형과 규모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재원¹⁾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2.2조 원 규모에서 13.8조 원으로 최종 확대 편성(+1.6조 원)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현안을 적기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필수 추정'입니다.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을 선별하였으며, 재해·재난 대응(3.3조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산업 지원(4.5조 원), 민생 지원(5.1조 원) 등 주요 3대 분야에 배분되었습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가용재원(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2025.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AI 생태계 혁신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강주영 아주대학교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교수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AI 투자 경쟁 치열
추경에서 AI 분야에 1.9조 원이 배정되나 더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
균형잡힌 AI 생태계 구축과 한국만의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
AI와 반도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 형평성 반영한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

-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의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EU의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 등
- 일본 AI 시장은 한국의 2.5배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격차 더 벌어질 전망
- 증거기반 재정운용 방식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투자 방향 모색 필요



현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양상 속에서,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를 통해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718조 원)를 투자하고, 중국은 2030년까지 약 2,000조 원, EU는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약 2,000억 유로(약 300조 원)를 AI에 투입하고 있다[1]. 이러한 세계적 AI 투자 경쟁의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AI 생태계를 혁신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2].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경고했듯이 “1년이 늦어지면 AI 경쟁력은 3년 뒤쳐진다”[3]. 이는 기술 혁신의 비선형적 속성과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기술 격차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시사하는 현실적 우려다[4].

현재 세계는 ‘AI 황금러시(Gold Rush)’라 불릴 만큼 투자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합작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RM도 파트너로 참여하며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1]. 중국은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세계 AI 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집행 중이다[1]. EU는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 전역에 ‘AI 기가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사카에 엔비디아 GPU 10만 장이 들어가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5,6]. 특히 일본의 AI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조 3,000억 엔으로, 한국의 5.2조 원 대비 약 2.5배에 달하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6].

정부의 2.4조 원 추경안 중 AI 분야에는 1.9조 원이 배정되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에 1.5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대표급 AI 모델 개발에 0.2조 원,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나머지 0.2조 원을 배정했다[2]. 구체적으로 K-LLM(한국어 기반 대형언어모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및 학계를 대상으로 GPU 1,550장을 임차하고, 석박사급 인재를 현 3,300여 명에서 1,650명 추가 확대하며, AI 혁신펀드를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는 0.5조 원을 투입하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위한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비율을 15~30%에서 30~5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대출프로그램을 4.3조 원에서 7.7조 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이 2.4조 원 규모의 투자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 중국 등이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2025년 우리나라 주요 산업 여건을 살펴보면[7], 반도체 중심의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 강화로 통상 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자급률 향상과 내수 부진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그리고 해외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 추세는 우리 수출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이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추경안은 GPU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GPU만 있다고 AI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성공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재, 응용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이는 혁신 시스템 이론(Innovation Systems Theory)과 산업 클러스터 모델(Industrial Cluster Model)에서 강조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과 일치한다[4, 8]. 글로벌 AI 선진국들의 투자 패턴과 성공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재 양성, 데이터 확보,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AI 전략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다른 요소들과 균형을 이룰 때 생태계 전체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AI 발전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AI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은 당장의 수요를 넘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현재 비수도권으로 확대되는 반도체아카데미는 지역 간 인재 양성의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이나, 이를 넘어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소버린 AI(Sovereign AI, 국가 주권형 인공지능) 확보의 중요성이다.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정보 해석과 의사결정, 문화적 가치 반영까지 관여하는 디지털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의 영역이다. 이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과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9]. 해외 기술에 의존할 경우, 디지털 종속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최근 GPT-4나 Claude 3 같은 글로벌 AI 모델들은 한국어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어의 깊은 뉘앙스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어의 복잡한 높임말 체계,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한국 특유의 문화적 함의를 담은 표현들은 글로벌 모델이 정확히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는 특히 법률, 의료, 문학, 행정 등 전문적이고 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한국 특유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K-LLM 개발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주권 확보의 핵심이다. K-LLM은 한국의 사회제도, 문화,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K-콘텐츠, K-법률, K-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라는 작은 언어 시장의 제약이 있음에도 AI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현상은 '작은 시장의 역설(small market paradox)'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제약이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된 사례이다[10].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AI 민간 투자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11]. 이는 범용 AI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으로, 적은 자원으로도 효과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오르 프리드먼 F2 벤처캐피탈 제너럴 파트너는 "이스라엘은 산업별 전문 지식과 뛰어난 AI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가 모인 생태계를 갖추는 등 버티컬 AI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11]. 이는 한국이 한국어 및 한국 산업 특성을 활용한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 법률 시스템 특화 AI의 경우, 한국의 법체계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영향을 모두 받은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법률 AI 솔루션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의료 AI 솔루션 역시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과 질병 패턴이 서구인과 다르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도 독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25년 AI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사전 결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결정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산업별 특화된 버티컬 AI(Vertical AI)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2]. 이는 AI 발전의 비선형적(non-linear) 진화 패턴과 산업별 특화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추세다. 국내 언론, 학술, 문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텍스트를 집대성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말뭉치(corpus)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언어모델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산·관·학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삼중 나선 모델(Triple Helix Model)'에서 강조하는 대학, 산업계, 정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한다[13]. 대학 학부, 대학원, 연구소 등 학술 기관과 기업,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하는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컴퓨터공학과 국문학, 사회학, 철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할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술만으로는 의미 있는 혁신이 어려우며,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분석이 결합할 때 진정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 운용에 있어 자원 접근성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에서 강조하는 지역 간 혁신 역량의 균형적 발전 원칙과 일치한다[14]. 경기도 및 지방 대학의 AI 연구실에서는 모델 학습을 위한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스타트업들은 서울의 기업들보다 혁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및 지방 대학과 중소기업에 위한 AI 컴퓨팅 자원 지원 프로그램, 지역 특화 AI 인재 양성 센터 설립, 원격 GPU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에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 정부가 확보하는 GPU 1만 장 중 일정 비율을 경인 및 지방 대학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술 혁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때, 지속가능한 AI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9조 원의 AI 추경과 0.5조 원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배정보다는 중장기 재정 계획 내에서 지속가능한 투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당국이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GDP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재정 투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는 증거기반 재정운용(evidence-based fiscal management)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AI와 반도체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두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반도체 기술의 혁신은 AI 발전을 가속화하고, AI의 발전은 다시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5년, 10년 후의 대한민국 위상을 결정할 장기적 안목에서의 투자이며, 디지털 주권과 기술 자립을 확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재정적 책임이자 의무이다.



참고문헌

- [1] 투데이신문. (2025, 2월 24일). “중국 2030년까지 2,000조 원 투자 전망...미·중 AI 패권 경쟁 가열”.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7>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전략: GPU 1만 장 도입 계획” [보도 자료]. 대한민국 정부.
- [3] 유상임. (2025, 4월 17일). “AI 1년 늦으면 3년 뒤쳐져... 국가경쟁력 갈릴 것” [인터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7160100017>
- [4] Nelson, R. R., & Winter, S. G.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 [5] 한국경제. (2025, 2월 11일), “EU, AI 육성에 300조 쏟는다...“美·中과 경쟁 시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18979i>
- [6] 조선일보. (2025, 3월 15일). “AI 시장 한국의 2.5배... 일본 데이터센터 전쟁 본격화”.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3/15/QRJJWYHXBEAVPRDUHMAVHKJYU/
- [7] KIET 산업연구원 (2024.12). “2025년 경제·산업 전망”. KIET 경제·산업 전망
- [8] Porter, M.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 [9] Couture, S., & Toupin, S. (2019). “What does the notion of ‘sovereignty’ mean when referring to the digital?”. New Media & Society, 21(10), 2305-2322.
- [10] Tiwana, A., Konsynski, B., & Bush, A. A. (2010). “Research commentary—Platform evolution: Coevolution of platform architecture,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dynamic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1(4), 675-687.
- [11] 전자신문 (2024, 12월 2일) “AI 민간투자 3위 이스라엘, ‘버티컬 AI’에 집중 투자”, <https://www.etnews.com/20241202000315>
- [12] 인공지능신문(2024년 12월 11일)2025년, “에이전틱 AI가 가져올 각 산업 분야의 혁신”... 엔비디아, 최고 전문가 10인이 공유한 ‘25년 AI 핵심 인사이트’,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3178>
- [13] Etzkowitz, H., & Leydesdorff, L. (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2), 109-123.
- [14] Cooke, P., Uranga, M. G., & Etxebarria, G. (1997).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stitutional and organisational dimensions”. Research Policy, 26(4-5), 475-491.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트럼프 2기의 강력한 관세 정책 결과 기업 등 경제 전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미국 촉발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국회, 추가 경정 2.1조 원 증액 편성 미국과 공동 산업 정책 발굴 등 원-원 협력으로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대응 필요 특히 투자 협력과 경제안보분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핵심 의제임

- 미국 관세 정책 결과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28%, 1901년 이후 가장 높음
-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 예고
- 기업의 피해 상쇄를 넘어 근본적인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재정 운용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들불처럼 번지는 불확실성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 Yale Budget Lab에 따르면 2025년 4월 15일까지 발표된 관세 정책의 결과로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28%에 달하며, 이는 19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미국 수입 시장에 20세기 이래 유례없는 장벽이 세워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0일에 지나지 않았다. 변화무쌍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을 온전히 기업의 책임으로 묻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이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이유다.

추경 주요 내용과 의의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예산 2.1조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 바우처, 국내투자 인센티브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 및 국내생산 확대 ▲고용충격 선제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및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 표시 외국환 평형채권 발행한도 확대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하더라도 관세 인상이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판매처를 잃고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추경 편성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완제품 기업의 35.8%는 수익성 악화를, 부품 원자재 기업의 36%는 납품 물량 감소를 주된 우려 사항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관세 충격을 최대한 내재화하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의 단기적 대응책으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국 기업의 46%가 원가 및 비용 절감을 관세 정책에 대한 주된 대응 전략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타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이번 추경은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기업이 받는 피해를 재정정책만으로 온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2024년 통관자료 기준 우 리의 대미 수출액은 총 1,315억 달러이며, 이 중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대상 수출액만 511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제232조 관세율 25%를 적용하면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 부담 해야 하는 금액만 128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가격경쟁력 훼손을 완전히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대략 18조 원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이미 시행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를 비롯해 곧 시행될 예정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얼마 전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상호관세 등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 대부분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체 대미 수출액을 바탕으로 25% 관세율을 가정하면 수입 기업들의 관세 부담액이 연간 4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경쟁력 하락을 모두 재정 지원으로 상쇄할 수는 없으니 피해 복구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넘어서는 재정 운용 방향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무역협상과 향후 재정정책 방향 개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통상 환경 조정을 원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2+2 협의체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투자 협력 ▲경제안보 ▲환율의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합의(4.24.)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투자 협력과 경제안보분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할 핵심 의제다.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 발맞추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공동 산업정책 구상

미국과의 공동 산업정책 구상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재정정책 활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동반된 산업정책에 인색한 편이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었던 소위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도 세액공제율, 일몰기한, 직접 환급 여부 등을 두고 진통을 겪어왔다. 국회에서 계속해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러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정부 직접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모보다는 법적 근거 수준 제시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기대 효과에 비해 부담이 클 수 있고, 산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국제적 시비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우려로 인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패키지 협상 차원에서 한미 공동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이러한 노력이 관세 인하로 이어진다면 그 수혜 범위는 전망위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24년 통관자료 기준 우리 대미 수출에서 상호관세 대상 수출액은 대략 43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상호관세율을 4%포인트만 낮추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관세 절감액은 대략 17.2억 달러, 즉 약 2.4조 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에서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편성된 증액분 2.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혜택도 상호관세 대상 품목 전반에 고르게 제공되니, 특정 산업을 위한 편향적 산업정책으로 비치기 어렵다. 더불어, 미국과 공동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우려도 경감될 수 있다.

한미가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동 산업정책의 대상은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을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이며 빠른 SMR 상용화의 필요성을 공약집 역할을 했던 '아젠다47'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마침 우리나라의 두산에너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에너지, SK이노베이션, 한수원, DL이앤씨 등이 뉴스케일, 테라파워, X-에너지, 홀텍 등과 함께 여러 SMR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주도의 추진이 쉽지 않다. 뉴스케일이 두산에너지와 함께 추진했던 아이다호 무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 상승 문제로 사업이 취소된 바 있다. 반도체가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미 국방부나 NASA의 예산을 자양분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SMR과 같은 초기 산업에 있어 국가 지원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한국은 시공 분야에, 미국은 설계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공동 산업정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은 향후 제3국 공동 진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산업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 SMR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조선 산업 투자를 비롯해 방산,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전력 인프라,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보완성을 활용한 산업정책 발굴이 가능하다.

경제안보 및 투자 협력 차원에서 미국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는 알래스카LNG 사업도 비록 자체적인 경제성은 낮지만,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갖고 통상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꾸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모든 정책은 결국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때 추진이 검토되었던 '한미 첨단기술 협력기금'과 유사하게 '한미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언제든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집행이 가능한 유연한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적으로 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하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18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출입은행이 집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은 이의 대략 12배인 221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2023년 기준 41억 달러로 전체 대미 그린필드 투자금액의 33%를 차지했다. 이는 유럽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금액(21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단일 국가로서 한국이 기록한 규모는 이례적이다. 그 결과 2023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 통관자료 기준 444억 달러로 당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557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에 불만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완화에는 양국 간 해외투자 불균형 해소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 발전에 필요한 파트너를 확보함과 동시에,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돌파구가 될 만큼 획기적인 수준은 아니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규모는 2024년 2,000억 원(약 1.4억 달러)으로 만약 현금지원율이 10%라고 하면 대략 2조 원(대략 1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상무부와 최종 계약된 보조금 액수가 대략 307억 달러인데 이 중 미국 외 기업에 배정된 금액만 124억 달러, 그리고 이를 통해 약속된 해외투자 금액만 1,106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규모를 10년 간 14억 달러라고 잡아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만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금액이 그보다 9배가량 큰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도 존재하지만, 흑자 전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신규 투자의 특성상 실질적인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법인세 절감은 실질적인 그린필드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에는 다양한 미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유치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의 과제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하면 ▲미국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유치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R&D 센터 유치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필요한 미국 소부장 기업 유치로 나뉘볼 수 있다. 한국이 제조 부문에 강점이 있어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된 반도체 분야만 해도 이온주입 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스가 평택에 아시아 본부를 두는 것을 제외하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설립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신규 투자와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본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다면 향후 한국이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 등 첨단산업의 R&D 센터 유치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요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매그니피센트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중 한국에 명시적으로 R&D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애플이 포항에 제조 R&D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정위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설립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R&D 센터와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매그니피센트7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R&D 센터는 중국, 일본, 대만에 대체로 설립되며, 명시적으로 각 R&D 센터가 하는 역할도 드러나는 편이다.

또한,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필요한 미국 측 소부장 기업 유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장 형성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도태 현상(shakeout)과 통합(consolidation) 과정을 거쳐 소수의 강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만약 소수의 강자가 이미 선점해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라면, 과감하게 미국의 핵심 기업을 유치해 공급망 하류에 있는 우리 기업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역조정 대응 확대

수입 확대에 필요한 무역 조정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논의한 무역 협상에서 영국은 ▲보잉 항공기 구매 ▲소고기 수입 쿼터 완화 및 관세 철폐 ▲에탄올에 대한 무관세 할당치를 제공하고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합의했다. 영국은 대미 무역 수지 적자국이기에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요구가 크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자국 수급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가 국내 산업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 개방은 국내 농가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면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구조에 적지 않은 전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2024년 우리 통관자료 기준 원유(HS27090010 이하) 수입 물량(톤 기준)의 72%는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와 같은 중동 5개국에서 공급된다. 사우디와 UAE는 주로 경질유를, 나머지 국가는 중질유를 생산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중동산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중 대략 26%만 쉘 15도에서 비중(gravity)이 0.796~0.855인 경질유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이다. 반면 미국산 원유는 거의 경질유로 중질유 비중은 한 자릿수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생산 구조를 바꾸지 않도록 사우디와 UAE산 경질유 수입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다. 사우디와 UAE는 대표적인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 시장인데 원유 수입이 감소하면 관련된 건설 산업과 해당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인위적인 무역 구조 조정은 결국 국내 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FTA를 추진하면서 직접적 피해 보전,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통상변화대응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100일 남짓한 시간에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국발 관세 인상은 시간을 두고 협상하는 형태의 FTA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가진 무역조정 및 공급망 조정 지원을 위한 보다 확대된 재정적 여력이 요구된다.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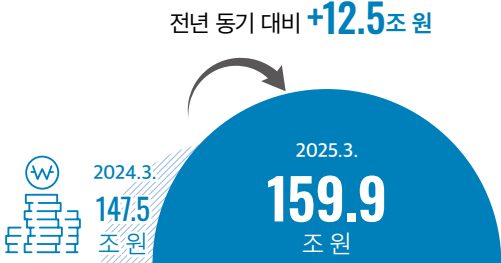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재정정책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20세기 이래 최대 규모의 무역장벽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차분하게 재정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공동 산업정책 발굴과 함께,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기업 유치를 통해 미국과 윈-윈하는 협력 기회를 가지면서 관세 인상 압박에도 대응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 대응 기반을 확대해 이 폭풍이 끝난 뒤의 미래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우리 명목 국민총생산의 대략 70%를 차지하는 수출을 둘러싼 전례 없는 도전 속에서, 재정정책의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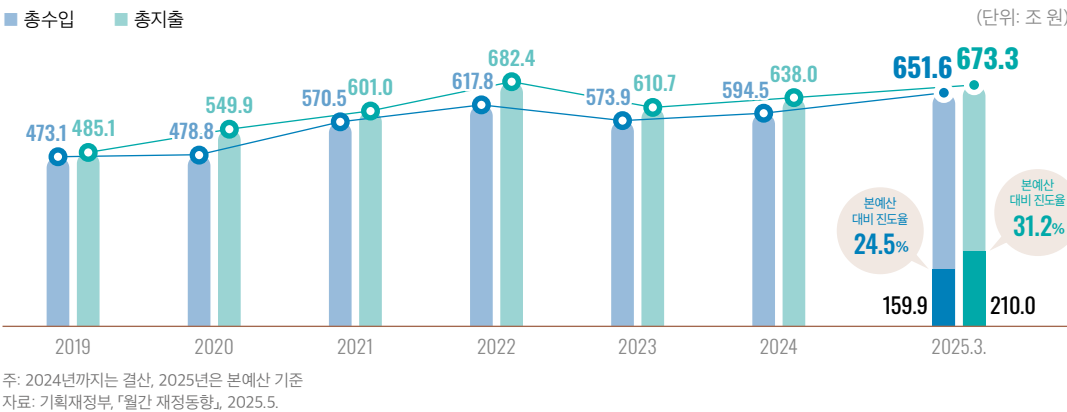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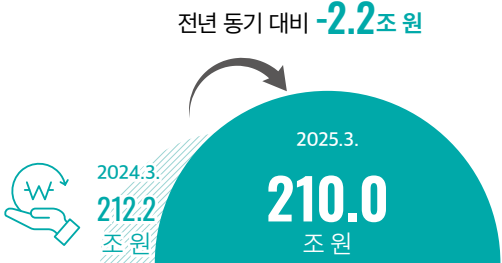
2025년 3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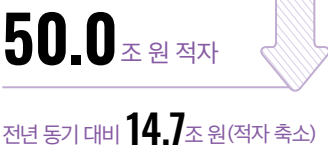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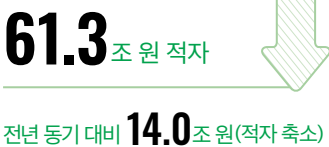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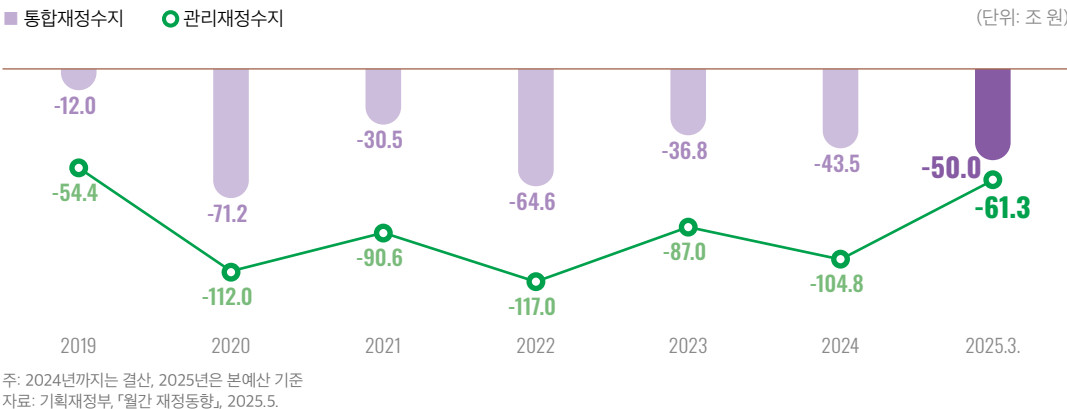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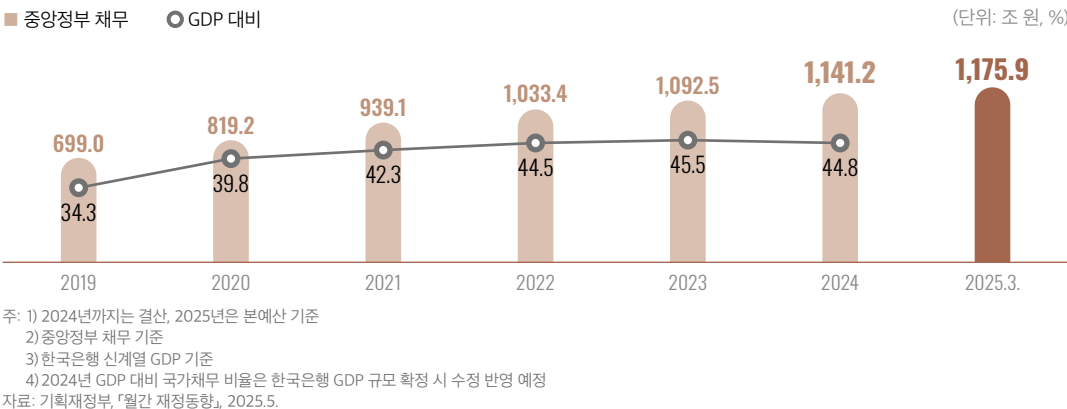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5.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6개월 차)	규모	2조 1,881억 달러	3조 2,528억 달러	1조 647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3.3%	9.7%	22.8%
독일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1,058억 유로	1,227억 유로	169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1.6%	8.4%	-8.2%
일본 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84조 2,085억 엔	98조 344억 엔	13조 8,259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2.1%	-1.4%	285.7%
프랑스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775억 유로	1,128억 유로	353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9%	0.0%	-12.3%
영국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1조 1,337억 파운드	1조 2,856억 파운드	1,519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3.3%	4.6%	15.8%

**자료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March 2025(4.9.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March 2025(4.23.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4.18.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 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mars 2025(5.2.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rch 2025(4.23. 발표)

대한민국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159.9조 원	210.0조 원	50.0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2.5%	-2.2%	-22.7%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8.5%로 상승, 1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미국,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
- 공화당은 4월 초 상원의 “One Big Beautiful Bill(크고 아름다운 법안)” 예산 결의안 승인 이후, 하원에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입법화 작업 착수

2 | 독일

- 기독교민주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연립 정부 구성 합의
- 독일 신임 재무장관이자 부총리로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지명

3 | 일본

- 이시바 시게루 총리, 미국의 전방위적인 수입 관세로 인한 산업 및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경제 대책 발표
-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재무장관 회담 내용 발표
- 일본 정부, 관세 충격과 정책 딜레마로 물가 급등과 성장 둔화에 직면

4 | 프랑스

- 프랑스 정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0.9%에서 0.7%로 하향 조정
- 프랑스 정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정 성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조정 계획을 발표
- 프랑스 정부, 유럽연합(EU)에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취급 수수료 부과 제안

5 | 영국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1%로 하향 조정(IMF)
- 통계청(ONS), 영국의 연간 공공 차입 규모가 예상을 150억 파운드 가까이 초과하여 총 1,519억 파운드에 달했다고 발표

6 | 중국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추가 인상하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
-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이 급감했으며,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
- 중국 정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상향 조정 및 5조 6,600억 위안(약 7,860억 달러)의 재정적자 설정

국제기구

1 | IMF

-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발간
- “IMF 재정 모니터 (Fiscal Monitor, April 2025)” 보고서 발간

2 | OECD

- “OECD 규제 정책 전망 2025(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정책보고서 발간
- “임금 과세 2025: 개인소득세 구조 분석과 세제 감면의 역할(Taxing Wages 2025: Decomposition of Personal Income Taxes and the Role of Tax Reliefs)” 보고서 발간

주요국

미국



4.1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8.5%로 상승하여 100년 만에 최고 수준¹⁾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적용
 - 4월 9일, 금융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경제 불안정성 증가로 고율 관세를 90일간 일시 중단한 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은 제외
- 관세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의 공급망 혼란 심화 우려
 -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여 84%의 보복 관세를 시행했고,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
-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부담 경감 및 국내로의 공급망 이전을 돕기 위해 4월 29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 시행²⁾
 -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가 일부 완화(1년간 15%, 추가 1년간 10%로 단계적 인하)되고 2년간 유예기간 제공

4.30. 미국,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³⁾

-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리튬, 그래파이트 등 전략적 광물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
 - 이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건 투자 기금 설립,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 지원을 목표
 - 우크라이나의 자원 주권을 보장하며,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포함
-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보복관세 유발 등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광물 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411-despite-trump-pause-overall-us-tariff-rate-at-highest-in-a-century>

2) <https://www.nytimes.com/2025/04/29/us/politics/trump-auto-tariffs-executive-order.html?smid=url-share>

3) https://www.nytimes.com/article/ukraine-mineral-deal-us-trump.html?campaign_id=7&emc=edit_mbae_20250501&instance_id=153705&nl=morning-briefing-asia-pacific-edition®i_id=211159131&segment_id=197131&user_id=438d364d7c6a02bda9c08a9c46741bf9

5.2. 공화당은 4월 초 상원의 "One Big Beautiful Bill(크고 아름다운 법안)" 예산 결의안 승인 이후, 하원에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입법화 작업 착수⁴⁾⁵⁾

- 이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2017년 세금 감면 조치를 영구화하고, 팀·초과 근무 수당·사회보장소득에 대한 추가 감세를 포함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
 -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을 주장하나, 민주당과 일부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연방 예산 적자 확대와 사회복지 축소 가능성을 우려
- 하원 공화당은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교육, 농업 관련 지출을 향후 10년간 약 8,800억 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이견이 존재
 - 이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4.5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독일



4.9. 기독교민주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연립 정부 구성 합의⁶⁾

- 이번 연정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부상을 견제하고, 경제 침체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등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연정 협약인 "독일을 위한 책임"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법인세 단계적 인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부채 제한 규정' 완화 등을 통한 공공 투자 확대 등이 포함
- 기독교민주연합(CDU/CSU)의 메르츠(Friedrich Merz)는 차기 총리로 지명되었으며, 사회민주당(SPD)은 선거에서는 부진했으나 주요 부처 확보 및 연금 보장 및 균형 잡힌 이민 정책 등에서 정책적 양보를 이끌어냄
 - 연정은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미국과의 무역 갈등 대응, 유럽 내 신뢰 회복 등을 목표
 -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지지율 하락과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여론조사 선두 등으로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도 존재

4) <https://www.nytimes.com/2025/05/02/us/politics/republicans-trump-tax-cuts.html>

5) <https://www.reuters.com/world/us/us-house-republicans-wrestle-with-trump-tax-cuts-medicare-needs-2025-04-28/>

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09/conservative-cdu-csu-centre-left-spd-coalition-government-germany>

일본

4.30. 독일 신임 재무장관이자 부총리로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지명⁷⁾

- 지명 부총리는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로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
 - 15년 이상의 의정 경험은 주로 국방 분야로, 이번 임명으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클링바일은 기존의 재정 보수주의를 탈피하여, GDP 대비 1%를 초과하는 국방 지출을 '부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헌법 개정을 주도
 - 이를 통해 독일은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국방비를 대폭 확대

4.24.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미국의 전방위적인 수입 관세로 인한 산업 및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경제 대책 발표⁸⁾

- 기업 금융 지원 강화, 리터당 10엔(약 100원) 규모의 휘발유 가격 보조금, 7월부터 3개월간 전기 요금 일부 지원 등이 포함
 - 총리는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미칠 관세의 심각한 영향을 우려,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각에 지시
- 이번 대책은 정부의 예비비 및 기존 휘발유 보조금 예산 활용으로 재정 부담 최소화 예정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의 대상 범위 확대
- 미국의 관세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

4.25.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재무장관 회담 내용 발표⁹⁾

-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증대를 위해 달러 약세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에 환율 정책 변경을 압박하지 않았음을 밝힘
 - 양국은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변동성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 7개국(G7)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
- 가토 재무상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고 요청
 - 양국은 환율 문제에 대한 긴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7)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new-german-finance-minister-klingbeil-is-champion-higher-defence-spending-2025-04-30/>8) <https://www.reuters.com/en/japan-decides-economic-package-help-ease-tariff-pain-pm-ishiba-says-2025-04-24/>9)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726268>5.2. 일본 정부, 관세 충격과 정책 딜레마로 물가 급등과 성장 둔화에 직면¹⁰⁾¹¹⁾

- 25년 4월 기준, 일본의 슈퍼마켓 쌀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하여 5kg당 평균 4,220엔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급등
 - 정부는 비축미를 방출하여 가격 안정을 시도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 일본 민간 기업들은 미국산 쌀을 중심으로 총 45,000톤 이상의 수입을 계획 중인데, 이는 전년 대비 30배 증가한 수치
 - 이러한 수입 증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일본 내 식량 안보와 소비자 물가에 중대한 영향
- 일본은행(BOJ)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 둔화로 202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1.1%에서 0.5%로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결정
 - 물가 상승률 전망도 2.4%에서 2.2%로 낮췄으며, 2% 목표 달성 시점을 2027년 하반기로 연기

프랑스

4.10. 프랑스 정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0.9%에서 0.7%로 하향 조정¹²⁾

-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 에릭 롬바르 경제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추가 가능성 시사
-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미 3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으며, 프랑스 경제관측소(OFCE)는 0.5%로 더 낮게 예측
 - 롬바르 장관은 2025년에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4.15.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조정 계획을 발표¹³⁾

- 에릭 롬바르 재무장관은 2026년에 추가로 400억 유로의 재정 조정을 시행할 계획을 밝힘
 - 고소득자에 대한 일시적 세금을 영구화하여 정부 재정을 보다 공평하게 만들려는 제안 포함
 -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

10)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japan-supermarket-rice-prices-up-16th-straight-week-imports-seen-jumping-2025-04-28/>11)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5/05/2dc8b65d773c-update1-boj-cuts-economic-inflation-outlook-for-fy-2025-keeps-rate-steady.html?phrase=Okinawa&words=#google_vignette12)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5/04/10/france-cuts-its-growth-forecast-for-2025-on-tariff-uncertainty_6740040_19.html13) https://www.lemonde.fr/en/politics/article/2025/04/14/french-finance-minister-announces-additional-40-billion-effort-in-2026_6740197_5.html

영국



4.29.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취급 수수료 부과 제언¹⁴⁾

- 셰인(Shein)과 테무(Temu)와 같은 중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150유로 미만 상품을 관세 없이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현행 제도를 조기에 개선하려는 조치
 - 프랑스는 EU의 2028년 면세 폐지 계획보다 앞서 2026년부터 수수료를 도입하자고 주장, 이러한 상품들이 소비자 안전, 정품 브랜드 보호, 세수 확보 문제를 강조
 - 프랑스 세관은 의약품 및 화장품과 같은 건강 관련 제품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제품 목록을 공개할 예정

4.22.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2025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6%에서 1.1%로 하향 조정(IMF)¹⁵⁾

- 이는 주요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며, 2024년 말의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침
- IMF는 영국의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이는 에너지 및 수도 요금 인상,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규제된 가격 변화에 기인
- IMF는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2%로 하락하여 영란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4.23. 통계청(ONS), 연간 공공 차입 규모가 계획대비 150억 파운드 초과하여 총 1,519억 파운드(약 2,028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¹⁶⁾

- 이는 전년보다 207억 파운드(약 276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199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차입 증가로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가을 예산에서 세금 인상이나 공공 지출 삭감을 고려해야 할 압박에 직면
- 차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 하락에 기인
 - 재무부는 앞서 병가 및 장애 수당 삭감과 공공 지출 축소를 통해 99억 파운드의 재정 여유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번 차입 초과로 이러한 계획에 차질 우려
- 경제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재정 준칙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14)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france-urges-fees-cheap-e-commerce-packages-eu-2025-04-29/?utm_source=chatgpt.com

15)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sustainable-finance-reporting/imf-chops-uk-growth-forecast-trump-tariffs-hit-global-economy-2025-04-22/>

16) <https://www.bbc.com/news/articles/cn4y9v8xwvmo>

중국



4.11.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추가 인상하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¹⁷⁾

-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
 - 중국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계속 침해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관세 전쟁은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비관세 조치도 병행
- 5.12 현재, 양국 간 합의로 미국의 대중 관세 30%, 중국의 대미 관세 10%

4.12.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이 급감했으며, 경제성장을 전망도 하향 조정¹⁸⁾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6개월 만에 최저치인 49.0으로 하락
 - 기업의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지표로, 50을 기준으로, 50 초과는 경기 확장, 50 미만은 경기 위축 의미
- 미국의 對中 관세 강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주문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연기
-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202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5%로 하향 조정
 -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하향 조정

5.4. 중국 정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상향 조정 및 5조 6,600억 위안(약 7,860억 달러)의 재정적자 설정¹⁹⁾

- 1조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 4,000억 위안의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하여 소비 촉진과 인프라 투자 확대
 - 광저우-잔장 고속철도 건설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지방정부 특별채를 활용하여 투자 확대
- 2025년 1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인프라 투자는 5.8%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p 상승
 -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제적 재정 확대가 단기적인 경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초장기 국채 발행과 은행 자본 확충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17) <https://apnews.com/article/china-us-trump-tariffs-2e05057e973e1e26d1b95c5be003b4cd>

18) <https://apnews.com/article/china-economy-tariffs-exports-trump-534bbbc0cbdafa70c43fb90ee5f5ae94>

19) <https://www.chinadaily.com.cn/a/202505/04/WS681716a7a310a04af22bd6f3.html>

국제기구

IMF

4.22.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발간²⁰⁾

- IMF는 2025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1월) 3.3%에서 2.8%로 하향 조정
 - 이는 2024년 3.3%에서 감소한 수치로,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무역 긴장 고조가 지목
- 한국의 성장률은 1월 전망 2.0%에서 1.0%로 1.0%p 하향 조정
-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0.9%p 낮은 수치
 - 관세 정책에 따른 공급 충격과 소비 둔화, 정책 불확실성 증가에 기인
- 중국의 성장률은 4.0%로 예상되며, 이는 수출 감소와 디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결과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4.3%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치
 -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IMF는 각국 정부에 대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권고

4.23. “IMF 재정 모니터 (Fiscal Monitor, April 2025)” 보고서 발간²¹⁾

- 전 세계적으로 고조된 불확실성과 급격한 정책 변화가 경제 및 재정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
 -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과 이에 대한 보복 조치, 그리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의 정체, 실망스러운 성장 전망, 높은 부채 부담과 방어비 지출 증가 등과 맞물려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위협
 - 부채 감축, 재정 완충 여력 확보, 우선 지출 확보,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강조
-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재정 상황은 전 세계 재정 흐름에 큰 영향
 - 미국은 2024년 7.3%에 달하는 높은 재정적자를 유지했으며, 금리 상승과 재정 불확실성으로 국채 수익률이 변동성 증대
 -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와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하며 재정적자가 8.6%까지 확대될 전망
- 신흥국과 저소득국들은 점진적인 지출 감축이나 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나서고 있으나, 높은 부채 상환 비용과 원조 감소, 낮은 성장률 등으로 여전히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

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4/22/world-economic-outlook-april-2025?cid=ca-com-compd-pubs_belt

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5/04/23/fiscal-monitor-April-2025#Chapters>

OECD

4.9. “OECD 규제 정책 전망 2025(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정책보고서 발간²²⁾

-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부가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 환경,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회원국의 규제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규제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 제안
 - ①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 ②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중요성 ③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정책 강화 ④ 환경 규제의 효과적인 실행 ⑤ 미래 대비를 위한 규제 기관의 역량 강화

4.30. “근로소득 과세 2025: 개인소득세 구조 분석과 세제 감면의 역할 Taxing Wages 2025: Decomposition of Personal Income Taxes and the Role of Tax Reliefs)” 보고서 발간²³⁾

- 2024년 기준 38개 회원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분석
 -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현금성 가족수당 등을 포함한 '조세 격차 (tax wedge)'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구 유형별로 비교
 - *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 인건비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임금(net take-home pay) 간의 차이로, 근로소득세,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 + 근로자 부담분), 현금성 급여수당 등을 포함한 비율
- 2024년 평균 단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34.9%로, 2024년에는 20개국에서 조세 격차가 증가하고, 15개국에서 감소
- 자녀가 있는 한 명의 소득자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조세 격차는 평균 25.7%로 단신 근로자보다 낮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수당을 제공하기 때문

2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regulatory-policy-outlook-2025_56b60e39-en.html

23)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ing-wages-2025_b3a95829-en.html

05

2025
May

Fiscal Calendar



재정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기획재정부, 5.1.)

-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5년 5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됨
- 국회 심의 과정에서 ① 재해·재난 대응 +0.1조 원, ② 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 원, ③ 민생지원 +0.8조 원, ④ 건설경기 보강 +0.8조 원 등 총 1.8조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 원 감액하여, 추경 규모는 12.2조 원에서 13.8조 원으로 확대
-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반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



경제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한국은행, 4.24.)

-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오락문화, 의료 등) 부진으로 0.1% 감소,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 감소 등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은 농림어업은 어업을 중심으로 3.2% 증가,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5% 감소,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었으나, 운수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며 전 분기 수준을 유지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 감소하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2%)을 하회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통계청, 5.2.)

-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1% 각각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4%,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4.3% 각각 하락

1월

재정

- 2026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재정

-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4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4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6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4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통계청 2025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발표

6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재정

-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통계청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재정

-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6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그림 속에 담긴 풍요와 번영

19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유럽은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다. 산업의 발달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져 대격변이라고 생각될 만큼 일상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고 경제적 풍요와 함께 유럽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현재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글·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 교수

01 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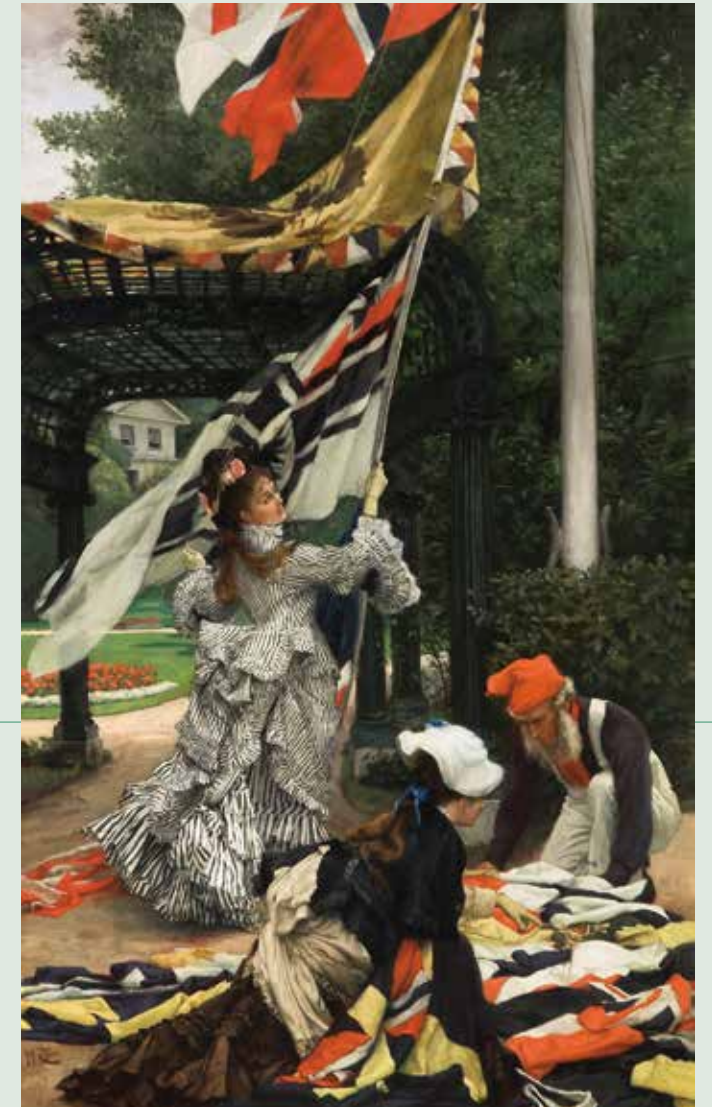
제임스 티소, 1876년, 캔버스에 유채, 76 x 99cm, 테이트 브리튼, 런던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의상을 차려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거리와 중산층의
의식주를 볼 수 있다.

02 Still On Top

제임스 티소, 1873년 경, 유채



‘그림은 시대정신의 모자이크’라는 네덜란드 역사학자 헨드릭 반 룬의 말을 증명해 주는 회화는 한둘이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미술관에 걸린 적지 않은 그림들이 종교개혁이나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세계대전 등 세계사의 격변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과 그 이후의 혼돈 속에서 프랑스 민중이 기다리던 영웅의 존재를 웅변하고 있으며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라파엘로의

‘예수의 변용’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유럽의 불안한 상황을 보는 이에게 직감적으로 느끼게끔 해준다. 물론 그림이 정치적 격변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풍요와 번영의 시대였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1837-1901)는 그림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 있을까?

브렉시트의 타격을 영 극복하지 못하는 요즈음의 영국과는 달리 백오십여 년 전,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단연 최강대국

이었다.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1819년에 영국의 증기선이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갔고, 1830년에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 철도가 가설되었으며, 상업 철도의 건설로 인해 철도역마다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다. 1페니의 우표로 편지를 보내는 우편 제도가 생겨났고, 1837년부터 시작된 전신 업무가 대륙과 영국을 연결해 주었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중산층의 하급 계층과 소작인에 속하는 성인 남자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하나의 확실한 계층을 이루며 선거 때마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되었다.

03 숭바꼭질

제임스 티소, 1980년



1842년에는 산업 발달로 인해 주식이 급등해서 백만장자들이 속출했다. 백만장자들 외에도 은행, 무역, 철도, 상공업, 보험, 언론계 종사자, 학교 교사, 변호사 등 영국 경제의 호황을 통해 새로운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생겨났고 이런 직업 종사자들이 빠르게 중산층으로 편입되면서 도시 거주 인구의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1854년 런던의 인구수는 250만을 넘어섰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로 달리는 기차인 지하철이 1863년 개통되었다. 지하철의 개통으로 인해 런던 교외에서 지하철로 도심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고, 런던은 더욱 팽창하게 되었다.

04 일본 물건을 보고있는 처녀들

제임스 티소, 1869년, 캔버스에 유채



05 Waiting for the ferry at the falcon tavern

제임스 티소, 1874, 유채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박람회

1851년에 런던에서 열린 국제박람회는 이러한 산업 혁명의 성과를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독일 출신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앨버트 공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얼리 어댑터’였다. 신기술에 늘 관심이 많던 그는 외국인이라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영국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박람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람회를 위해 하이드파크에 세워진 ‘수정궁(Chrystal Palace)’ 자체가 신기술의 개가였다. 수정궁은 미리 만들어 둔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세워졌으며, 투명한 유리를 철근이 에워싸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수정궁은 대량생산, 조립식 제조, 체계적인 현장 조립 등이 빅토리아 시대의 기술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정궁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개월이었다. 총연장 13km가 넘는 진열대에 1,300여 개 참가 기업에서 내놓은 출품작들이 전시되었다. 박람회는 5개월 동안 전 영국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600만 명 이상이 찾아왔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언론과 문화 역시 눈부시게 발전해서 잡지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가 1845년에 4만 5천 부를 발행했다. 언론의 발전은 곧 대중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찰스 디킨스, 헨리 제임스 등 인기 있는 작가들이 잡지에 소설을 연재했다. 1852년과 53년 사이에 소책자 형식으로 19회에 걸쳐 출간된 디킨스의 ‘황폐한 집’은 71만 부 이상이 팔렸다. 한 마디로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인들에게는 영광의 시대이자 진보의 시대였다.

런더너의 여유로운 휴일 풍경

영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 제임스 티소(1836-1902)의 그림은 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영국의 중산층을 담은 작품들이 많다. 특히 티소의 그림 속에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의상을 차려입은 영국 여성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빅토리아 시대의 의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그림을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다. 티소의 부모는 파리에서 큰 모자가게를 운영하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여성들의 화려한 모자와 의상은 티소의 그림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고,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거리와 중산층의 의식주를 볼 수 있다.

1876년 티소가 그린 ‘휴일’이라는 그림은 런던의 중산층들이 초가을의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의 배경은 런던 북부의 부유한 동네 세인트 존스 우드인데, 여기에 티소의 집이 있었다. 영국인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성장했던 티소는 35세가 된 1871년 런던으로 이주해 이 동네에 정착했다. 화가에게 익숙한 동네와 이웃들을 그린 그림에는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풍요로운 분위기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겨 있다.

꽃과 리본으로 장식된 화려한 모자를 쓰고 체크 무늬 무릎 담요를 덮은 그림 오른편의 여성, 베이지색 수트에 대담한 색감의 모자를 쓴 채 반쯤 누워 있는 남성, 남자의 손에 들린 커피잔에 막 커피를 따르는 줄무늬 드레스의 여성, 뒤편에 앉은 노부부까지 모두 여유롭고 우아하며, 동시에 기품이 넘치는 모습이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향하는 즈음이다. 공원의 나뭇잎들이 서서히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림의 뒤편, 나뭇가지들 사이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사랑의 밀어를 나누는 연인들의 모습도 보일 듯 말 듯하게 등장한다. 그림 속의 사람들은 모두 런던이라는 도시의 풍요로움 속에서 편안하게 휴일의 오후를 만끽하고 있다.

‘휴일’의 런던너들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이지만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은 아니다. 이 시기의 영국은 정치, 경제의 변영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낸 상태였다. 그림에 담긴 런던너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믿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시민들이 각자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경제적 풍요를 넘어선 이상적 사회이며, 우리가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06 배 위의 무도회

제임스 티소, 1874, 캔버스에 유채,
129.5×84cm

이 시기의 영국은
정치, 경제의 변영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낸 상태였다.
그림에 담긴
여유로운 모습은
믿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07 Tea

제임스 티소, 1972년, 유채



08 템즈강에서

테임스 티소, 1874년, 캔버스에 유채



09 온실에서(the rivals)

제임스 티소, 1975sus, 캔버스에 유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와 기대

이돈일 前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여행지에서 만난 성인지 예산제도

약 1년 전 우리 부부는 여행사의 패키지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를 며칠간 다녀온 적이 있다.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곳의 거리는 작은 쓰레기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고 비교적 질서정연한 선진국다운 면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실에 관한 얘기다. 여행 기간에 일행 30여 명이 한 대의 버스로 이동했는데, 가이드는 여행 내내 안내하기를 화장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녀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하차 시에는 제일 먼저 화장실에 다녀올 것을 강조했다. 사실이였다. 대체로 여행지마다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보였다. 특히, 여자

화장실 앞에는 남자 화장실 앞보다 서너 배 이상의 긴 줄이 이어졌다. 나는 가이드에게 이런 상황이 의아해서 물었더니 20여 년간 이곳에서 가이드를 해오고 있는데 늘 이러했다고 무심한 듯 대답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제도'가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에 공중화장실에 대해 성 중립적 관점(소극적 평등)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적극적 평등)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자들이 화장실 이용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남녀 화장실을 똑같은 수가 아닌 여자 화장실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게 성인지적 관점이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 호주에서 시작되어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 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9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제정(2007.1.1. 시행) 시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되었다. 국가재정법 제 16조 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지예산제도’로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여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즉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은 성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50대 50으로 예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잘 반영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매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보고서로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기금의 수혜를 받고 예산·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부처별 역할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제도의 총괄부처로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대상사업 선정 기준 포함)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각 부처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을 배포하며,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제작 협조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을 맡아 해당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산센터는 컨설팅 및 자료 취합 지원 등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제고 및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기준 마련 및 대상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서의 경우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논의하여 마련한 작성 지침을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에 송부하면,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성평등 목표 추진 결과 및 사업별 성평등 효과분석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성인지 결산서를 기획재정부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

표 1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기관명	역할 및 기능
기획재정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작성 및 배포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취합 및 검토 •성인지 예·결산서 국회 제출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작성 협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 및 지원 총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 (부처 사업담당자 교육)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원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방식 심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선정 심의
해당 부처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
감사원	•성인지결산 검사

표 2
2025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억 원, %)

구 분		2024 (A)	2025 (B)	증감 (B-A)	증감률 [(B-A)/A]
중앙관서 수		40	35	△5	△12.5
회계	예산	93,487	102,436	8,949	9.6
	사업 수	206	189	△17	△8.3
기금	예산	143,483	154,875	11,392	7.9
	사업 수	77	75	△2	△2.6
합계	예산	236,971	257,312	20,341	8.6
	사업 수	283	264	△19	△6.7

※기획재정부, 세부사업 기준

2025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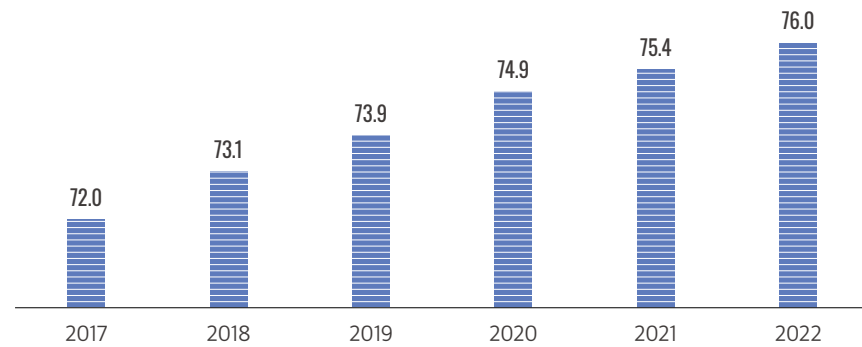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도 예산 기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35개 중앙관서의 264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25조 7,312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673.3조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중앙관서 수는 5개(12.5%)가 감소하고, 대상 사업 수는 19개(6.7%)가 감소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2조 341억 원(8.6%)이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 등이 다소 감소한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을 선정 및 재분류한 결과로 보인다.

각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9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OECD 회원국 내에서도 점차 확산[2016년 12개국 → 2022년 23개국]중이다.

| 그림 |

국가성평등지수 추이
(2017~2022년)

주: 여성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연구수행)는 매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출 시 최근 6개년의 지수를 일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지수가 같은 시점에 산출된 것임에 유의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3.12.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제도로써 성인지 예산이 시행되는 국가는 점차 증가해 가는 추세다.

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11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 및 지자체에서 성인지보고서를 작성하며, 성평등 사업의 성과를 간략히 서술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도입 근거를 만들어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 등과 함께 조기 도입 국가며,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의 주도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수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성인지 예산서를 재정

당국이 직접 작성 제출하고, 작성 대상 사업의 분량이 방대하며 사업별로 성별 수혜 분석 통계를 작성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인식이 크게 신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분석이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많은 보완과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 및 기대

정부는 자체적으로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¹⁾를 활용하며, 2022년 기준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을 기록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성평등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72.0점 이래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성평등지수²⁾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고등교육 이수 등 교육영역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보건 분야 및 유급출산·육아 휴직 기간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 참여와 기회, 여성권한, 정치적 권한 부분에서는 주요국 대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성평등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을 통해 재정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예산 편성, 심의, 집행 및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제언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수단(예, 성과평가, 사전성별영향평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 당국의 조직에도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부처 내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양성평등정책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성인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지향점과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 및 재분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단순히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배분한 예산이 아니다. 재정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제도로써 모든 국민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로,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으로 구성된 지표화된 값(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2) 국제성평등지수는 5개 영역(교육, 보건,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별 4개의 지수(성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 성격차지수, 유리천장지수)로 구성된 지표화된 값

미국 주도 인공지능 생태계, 한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

유재홍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대선 정책의 핵으로 떠오른 AI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제 AI는 더 이상 일부 과학기술 전문가들만의 담론이 아니다. 경제, 안보, 교육, 산업, 복지 등 국가 운영의 전 영역에서 AI의 영향력이 커지며, 'AI 국가'로의 전환은 국민적 합의이자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약속하며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관심은 민간과 학계의 요구와도 맞물린다.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단체, 경제 단체, 관련 협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앞다퉈 정책 제언을 발표하며 AI 인프라 투자, 전문 인재 양성, 거버넌스 정비,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과제를 촉구하고 있다. 즉,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AI 중심의 혁신 국가로 본격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는 글로벌 AI 산업

AI 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책 요구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의 냉정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글로벌 AI 산업은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직 통합되는 추세다. AI는 반도체, 클라우드, AI 모델,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된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선도하는 것은 단연 미국의 빅테크들이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GPU)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며, 오픈AI, 구글, 메타 등 주요 플레이어는 자사 클라우드와 AI 모델, 데이터셋을 통합해 완결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초기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자사 클라우드(Azure) 인프라를 학습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으로 삼았고, 구글은 자체 AI칩(TPU)과 딥마인드의 AI 기술 역량을 결합해 AI 모델(제미니)을 상업화했다. 이들은 이미 수십만 장의 GPU를 확보하며 AI 모델 역량을 높여가고 있고, 조만간 백만 장 이상의 GPU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이들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장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1월, 오픈AI는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5,000억 달러(한화 약 700조 원)를 투입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클라우드 확장 계획이 아니라, AI를 새로운 산업·군사·정책 인프라로 간주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한국의 대응 현황

한국의 대응은 늦지 않았다.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이듬해 구글 등의 경쟁 업체들도 유사한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했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LG AI연구원, KT 등도 각각 '하이퍼클로바X', '엑사원2.0', '믿음'이라는 이름의 거대 언어모델(LLM)을 출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였고 2025년 5월에는 1.9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의 월등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인해 AI 경쟁력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에 대한 대대적 투자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버린AI에 투자하는 중국 외 국가들

한편, 중국을 비롯해 영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등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인공지능 산업의 독점화를 경계하며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와 글로벌 견제에도 불구하고,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센스타임, 화웨이, 샤오미 등은 AI 모델,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동시에 확보하며 서구권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중국은 AI를 사회 통제, 국방 기술, 산업 구조 재편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중국 내 교육 제도와 군 인프라를 활용해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면 공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했으나,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 후 2월에 개최된 프랑스 AI Action Summit을 계기로 EU의 AI법의 엄격한 규제 수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EU의 AI 규제 중심 정책이 유럽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프랑스는 2025년 2월 1,090억 유로 규모의 AI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AI 인프라, AI 연구개발, 스타트업과 기업 투자를 약속했다. 영국은 2023년 9억 파운드를 투자해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부 주도 AI 모델 BritGPT를 개발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18년 국영 AI 기술 기업인 G42를 설립하며 거대언어모델(FALCON)을 자체 개발했고, 일본은 2024년부터 소프트뱅크 중심의 민간투자과 경제산업성의 1,000억 엔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으로 소버린 AI 구축에 늦게나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생태계에 종속되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AI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인프라 추격’에서 ‘AI 활용 강국’으로 전략 모색 필요

우리나라는 유선 인터넷을 빠르게 보급하면서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플랫폼의 선점 기회를 놓쳤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핵심 엔진에 해당하는 AI 모델을 중심으로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여전히 추격국의 입장이다. 이제 현실적으로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와 컴퓨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와 자본력이 핵심 자원인 AI 경쟁에서는 상대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게 추격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단지 투자 규모에서 앞선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술, 인재, 인프라, 정책, 자본이 결합한 복합 생태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예산을 늘려 이 경쟁에 뛰어 드는 것은 실효성 없는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그들과는 다른 선택 즉,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 융합’을 통해 특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의 인프라 투자

우선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GPU 확보 목표는 절대량이 아니라, ‘활용성’과 ‘접근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디지털 SOC형으로 배치해, 민간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되, 이용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편리한 접근을 보장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국에 분산된 SOC형 GPU 클러스터, AI 개발 플랫폼, 공공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민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특화 AI 개발

한편, 한정된 인프라에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AI 특화 모델을 다양한 산업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조,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산업별 AI 난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과 대학, 출연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형 AI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결함 예측, 신약 후보물질 생성, 스마트 팩토리 최적화 등은 글로벌 모델이 아닌, ‘한국형 특화 AI’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다.

실전형 AI 융합 인재 양성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낼 인재가 없다면 소용 없다. 한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단체에서 제안한 이스라엘 탈피오트식의 AI 전문 사관 제도, 병역 특례 확대 등은 고급 인재를 조기 육성해 벤처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인터넷 성장기에 우리나라 1세대 IT 벤처기업가들과 산업 역군을 양성한 제도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이론 중심의 기존 교육에서 탈피해, 산업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 현장 인턴십, 실전형 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산업 난제 해결형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원과정, 직업훈련 과정에 접목해 실전형 융합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100 Experiments’라는

산업체의 다양한 문제를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고, AI 전문인력을 연계하여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의 정책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생태계와 경량화 전략

컴퓨팅 인프라(GPU)와 모델 개발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면, 오픈소스 AI 모델 생태계를 중심으로 경량화, 산업 특화 모델, 한국어 모델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법률, 제조 등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한국형 도메인 특화 LLM’을 개발하고, 이를 개방형 라이선스로 배포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올 1월 중국에서 개발된 DeepSeek-R1 모델이 오픈AI의 최신 모델(o1)의 성능을 1/10의 학습 비용으로 달성했다고 보고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의 모델은 오픈소스 AI 모델인 알리바바의 쿼웬과 메타의 라마를 미세조정된 모델로 오픈 소스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메타는 오픈소스 AI 모델인 LLAMA를 지난 2023년 2월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가고 있다. 2025년 4월 공개한 LLAMA4는 멀티모달을 지원하고, 전문가 모델을 도입하여 추론 성능을 높이고, 1천만 토큰을 입력으로 처리하며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라마는 2025년 4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12억 회를 돌파하였다. 자원이 부족한 개발 기업이 오픈소스 AI를 활용하고 핵심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이다.

거버넌스 혁신 - 통합형 정책 집행 체계

끝으로,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제도, 인재 등 복합

자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산학연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야 그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현재 AI 정책은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현재 법으로 규정한 국가AI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AI 지능 정책을 총괄할 정부 부처와 국가AI최고 책임자와 같은 직책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가 높다. 이러한 국가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국가의 중장기 AI 정책 로드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AI정책연구소 설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국가

인공지능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기술이다. AI는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무리한 추격도 전략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DNA를 가진 나라다. 과거 정보통신, 반도체, 모바일 산업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최적화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활용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 산업 기반 활용 전략, 실전 중심 인재 양성,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일관된 정책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전략적 AI 활용국’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생태계 전략으로 AI 서비스가 꽃을 피우고, AI와 결합한 제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한다.

바르셀로나, 도시계획 플랫폼이 도시의 운명을 바꾸다 : 변방의 시골 도시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글·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교수

BARCELONA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의 바르셀로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도시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던 1988년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4년 뒤인 1992년에 개최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TV로 송출되면서 단숨에 유명해졌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승리한 손기정 선수 이래 56년 만이어서 매우 감격스럽게 다가왔고, 마지막 가파른 문주의 언덕을 오히려 더 힘차게 뛰어오르면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역전의 금메달을 땀다는 점에서 당시 전 국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바르셀로나는 유명한 도시다. 바르셀로나 인구는 160만 명 정도지만, 매년 찾는 관광객 수가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1,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로, 유럽 도시 중 사람들이 많은 찾는 도시로 열 손가락에 드는 도시다. 대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는 드물다.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를 좋게 평가하고 많이 방문하는 이유로 꼽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지중해풍 라이프스타일을 꼽는다. 따뜻한 기후와 느긋한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해변 등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환경 특징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 백 개의 거의 모든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다른 도시에 비해 특출나게 찾게 만드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연환경보다도, 바르셀로나를 독보적으로 장소로 만드는 것은 역시 인문환경 때문이다. 즉, 지리와 기후 또는 산과 강처럼 그곳에 주어진 자연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속에서 그곳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에서 최근 널리 알려지고 가장 눈에 띄는 것에는 몇몇 건축물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있는 성가족성당(Basilica i 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ília; 줄여서 Sagrada Família)이다. 이 성당은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하였고, 1883년부터 가우디 (Antoni Gaudí, 1852-1926)가 책임을 맡기 시작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0여 년 간 만들었다. 가우디가 추구했던 자연과 같은 건축물을 구현 하려는 이상과 사람들이 기부하는 십시일반의 돈으로 만들다 보니 1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외에도, 바르셀로나 북측 언덕의 남쪽 비탈에 만든 구엘 공원(Park Güell)도 유명하다. 190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단의 주거지로 조성하고자 만들었지만 주택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고, 공원은 1926년에 개방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부자의 주택을 멋지게 만들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04년에 바트요를 위해 건축한 카사바트요(Casa Batlló)가 있다. 이러한 건축물 덕분에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유명한 건축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도시계획

: 세르다의 1859년 바르셀로나 도시계획

하지만, 가우디의 건축물이 지금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약 40년 앞서서 선구적으로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을 한 세르다(Ildefons Cerdà, 1815-1876)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세르다의 도시’라고 회자하고 있다.

1800년대 중반만 해도 바르셀로나는 중세 성벽에 둘러싸인 좁은 공간이었고, 그 안의 인구밀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은 열악했으며, 똥오줌과 오폐수는 통제 불능이었고, 물은 더러웠고, 따라서 도시는 일련의 콜레라 전염병과 폭동 등으로 폭발 직전이었다. 대부분의 길은 폭이 3m도 안 되었고, 좁은 길은 폭이 1m

밖에 되지 않았다. 길도 좁은데 길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작업을 하느라고 교통은 막히고 정체가 심했다.

바르셀로나는 주요 항구가 있는 도시였고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섬유산업이 발달하였다. 바르셀로나의 산업이 커지고 경제활동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1800년대 중반 바르셀로나의 인구는 약 187,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약 2.2km²의 작은 바르셀로나 중세 도시 성벽 내부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인구밀도가 856명/ha에 이르러 유럽에서 가장 조밀한 도시가 되었다. 당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던 파리 또는 런던 인구밀도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 결과 공기 순환이 나빠졌고 공기가 탁해졌다. 사람들은 과밀화된 도시가 자신들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의 위생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전염병은 큰 문제가 되었다. 콜레라로 1834년에서 1865년 사이 1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평균 수명은 부유층이 38세, 노동 계층이 20세 정도였다 (Aibar, 1997). 도시의 위생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은 의사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었다. 스페인 중앙 정부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새로운 업무를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계획가 세르다에게 부탁하였다. 세르다는 공학 교육을 받았고, 당시의 신기술인 철도, 가로등, 전신, 하수도 등에 대하여 해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구조와 조직 관련 이론을 저술한 사람이었기에 정부가 의뢰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선구자였던 세르다는 도시와 도시계획의 기초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연구하고 고안해야 했다. 세르다의 도시계획안도 매우 혁신적이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분야를 체계화하고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은 더욱 혁신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르다는 도시연구를 발명했고, 그리고 ‘도시화(urbanization)’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세르다는 도시가 무엇이고, 효율적인 공존 공간일 뿐만 아니라 웰빙의 원천으로서 도시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연구하였다. 그는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나타난 열악한 삶의 질이나 전염병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르셀로나의 과밀, 비위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이 맑은 공기의 숨을 쉬면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시가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세르다는 바르셀로나의 기존 시가지 경계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1800년대 중반 바르셀로나의 인구는 20만 명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세르다는 약 7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70만 명의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를 넘어 넓은 토지가 필요하였다. 시가 면적 인구밀도를 약 250명/ha로 계획함에 따라, 기성의 시가지를 포함한 권역 내 총 시가 면적은 약 30km²로 잡았고, 격자와 블록으로 구성된 중점적인 도시확장지역의 면적은 약 20km² 정도로 계획하였다. 이는 모두 철저한 공학적 계산의 성과였다.

그는 기존의 바르셀로나 시가지와 주변의 7개 마을을 통합하는 공간적 범위에 미래의 인구와 여러 사회 경제활동을 담을 수 있다고 보았다. 도시 전체는 격자 가로망으로 구조를 잡았다. 이는 바르셀로나 도시확장계획이라고 명명되었다.

세르다의 인도주의, 평등, 보행,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공기, 햇빛, 보행자 이동, 안전을 제공하고, 도시가 자연과 상호 작용과 연결되도록 하는 도시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격자형의 가로망에, 기존의 바르셀로나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사선 가로망이 중첩하여 계획하였다.



그림 1

세르다의 1859년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안
: 바르셀로나 기존 시가지와
주변지역

출처: Lopez (2010)

그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거리가 좁을수록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충분히 넓은 길이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교통의 흐름과도 관계있지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밝은 빛과 맑은 공기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치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가로는 각 블록이 햇빛을 받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서에서 남동을 기본 축으로 잡고 격자형으로 계획되었다.

가로는 단순히 차량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 모두의 소통 공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가로 양측의 보행전용 공간에 가로수를 심는 것을 계획하였다.

가로수를 심어서 쾌적한 보행 공간을 만들고 자연 생태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도시에 가로수를 일부러 심는다는 생각도 당시로서는 새롭고 획기적인 놀라운 발상이었다.

그는 특히 도시에서 원활한 보행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계획안에 담았다. 모든 가로는 양측에 각각 5m의 보행전용 공간을 두도록 계획하였다. 연결성이 높은 가로망과 보행전용 공간의 설정이 토대가 되어 바르셀로나는 오늘날 도시 전체가 걸어서 가능한 보행도시가 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

Barcelo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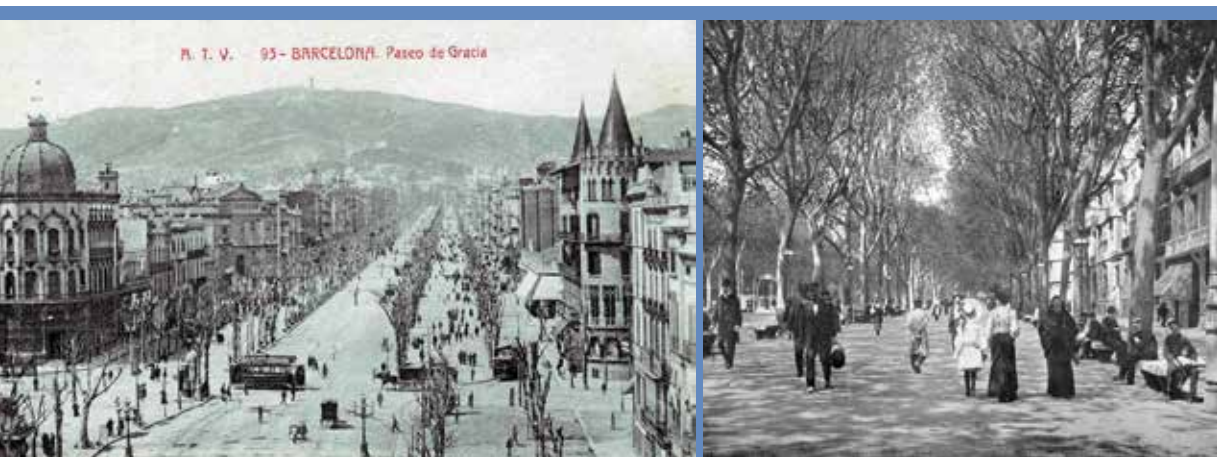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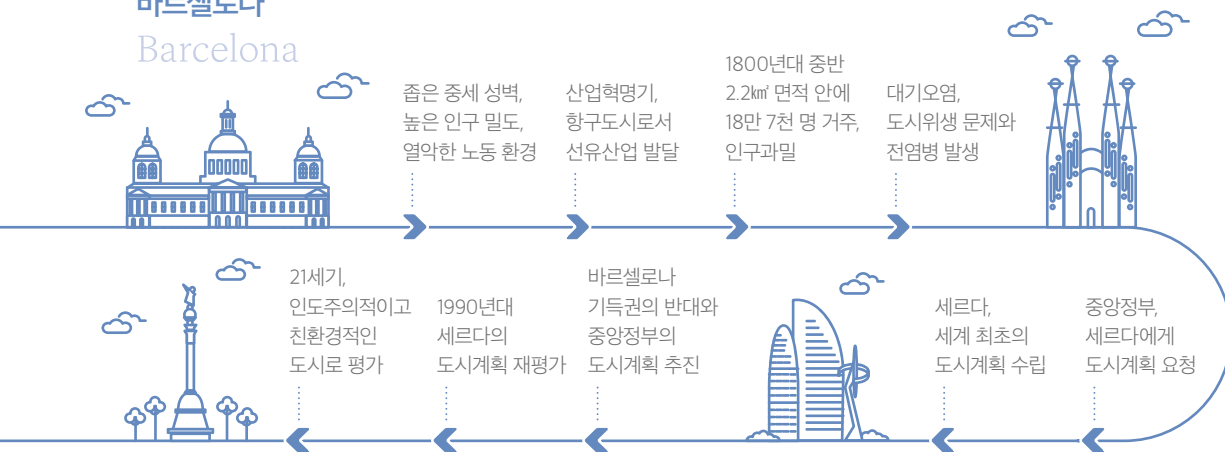


그림 2 그라시아(Gracia)의 가로 전경

출처: barcelonapaseodegracia.com

그림 3

세르다의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바르셀로나,
그리고 성가족성당 모습



출처: www.agoda.com

세르다의 도시계획에 대한 당시 시민들의 강한 저항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고자 했던 스페인 중앙정부는 세르다의 도시계획을 크게 반겼다. 하지만, 세르다의 도시계획은 가진 것 많은 자들의 탐욕, 정치, 질서,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의 무관심으로 큰 저항에 부딪혔다.

바르셀로나 부자와 권력자들은 차별을 원했고 거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차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넓은 토지가 잘려서 분할되고 공공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성벽 내부의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특권과 독점권을 잃게 될까봐 걱정했다. 성벽 외부의 지주들은 토지를 지키려고 하였지만, 동시에 성벽 밖의 땅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가져올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사유화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바르셀로나의 모든 사람이 세르다의 계획을 반대한 공통된 이유가 또 있었다. 지역감정 때문에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도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하향적 조치라고 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무시라는 주장을 했다.

세르다의 도시계획이 발표되자, 바르셀로나시 자치정부는 즉각적으로 세르다의 계획을 대체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설계 공모하였다. 같은 해인 1859년에 공모 결과로 건축가 로비라(Antoni Rovira)의 설계안이 채택되었다.

로비라 계획은 도시의 부자와 권력자들의 바람을 그대로 반영했다. 도시의 모습은 구시가지 중심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전통적인 방사형으로 구조를 잡았다. 길은 좁게 할당되었고, 웅장한 기념물과 상징적 건축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도시공간은 계층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전통의 중심부에 부자와 권력자들이 살도록 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주변부로 밀어내도록 위계적 분리를 설계하였다. 또한 교외 지역에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는 최대한 건들지 않고 유지하는 설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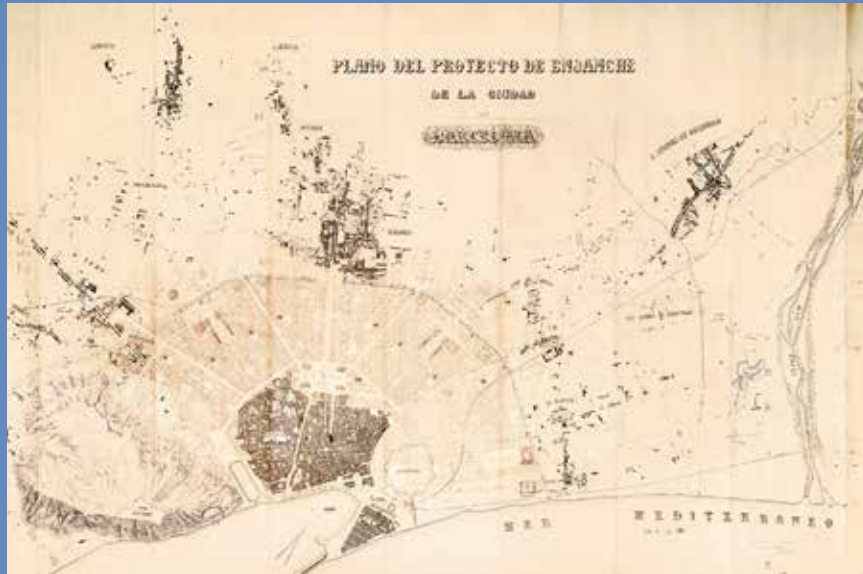


그림 4

로비라의
1859년 바르셀로나와
주변지역 계획안

출처: Lopez (2010)

로비라의 설계안에는 더 나은 인간사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 위생과 이동, 학교와 병원 같은 사회 공공서비스, 적절한 토지이용, 배치와 규모 등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또한 전혀 없었다. 언뜻 그림으로만 보면, 로비라의 설계는 세르다의 도시 계획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로비라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더 나은 삶과는 무관하기도 하고,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삶은 더 나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설계안이었다.

바르셀로나 도시 운명의 역사적 갈림길

스페인 중앙정부는, 로비라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이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세르다의 도시계획을 추진하였다. 바르셀로나는 지속적으로 저항하였지만 스페인 중앙정부는 세르다의 도시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르다의 도시계획은 바르셀로나에서는 외면당했고, 바르셀로나는 세르다의 도시 계획을 폄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르다를 폄하하는데 앞장 선 사람들은 바르셀로나의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건축가들이었다. 바르셀로나 건축가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세를 가지며 영향력을 가진 자칭 ‘예술가’들이었다. 하지만 세르다는, 많은 경험과 저작이 있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었고 당시 카탈루냐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도시계획가였다.

바르셀로나의 건축가들은 세르다의 도시계획을 위협적인 경쟁으로 인식하였고 질투와 불신, 폄하와 오점 찾기로 일관했다. 바르셀로나의 건축가들은 스페인 중앙정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대신 도시계획을 수립한 세르다를 희생양 삼아 이념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공격하였다. 도시계획은 물리적 사회적 과학과 기술의 지지를 받았지만, 건축가들은 부자와 권력자

중심의 정치 프레임을 통해, 그리고 ‘예술’을 핑계 삼아 도시계획을 방해하였다.

바르셀로나는 세르다가 카탈루냐 출신이면서 중앙 정부의 ‘노예’라고 비방하였으며, 카탈루냐의 반역자 또는 배반자라고 공격하였다. 이러한 공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세르다와 그의 도시계획은 1970년 대까지도 그와 관련된 기록이 삭제되거나 비방의 대상으로 일관되었다.

세르다 도시계획의 재평가와 복권

세르다는 마침내, 그의 도시계획 이후 120년이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카탈루냐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무식함과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고향인 카탈루냐와 조국인 스페인에서 칭송받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칭찬받기 시작했다.

바르셀로나가 1992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 도시는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가 세르다의 도시 계획에 대한 평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야 비로소 오늘날의 바르셀로나가 도시로서 성공한 데에는 세르다의 도시계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되었다. 세르다의 도시계획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살기 힘든 지방 도시에서, 진정한 근현대의 성공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이러한 바르셀로나는 저절로 어쩌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1859년 세르다의 도시계획을 통해 발생한 것이다.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구적 도시 계획가인 세르다가 미래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하자, 이를 시기한 건축가들은 그를 폄하했지만, 건축분야와 완전히 다른 도시계획의 과학적 접근

방식과 사회발전적 가치지향은 우리가 도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계 최초로 도시계획을 개척한 세르다의 도시계획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인도주의적 도시이고, 도시와 산과 강과 바다와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이며, 개인과 가족의 삶이 행복한 인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다. 부자와 귀족만이 아닌, 평민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가 되었고, 자연토지의 개발을 최소화하여 압축적으로 도시를 만듦으로써 많은 자연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시가지 내부는 녹지와 자연이 조화로우며, 도시의 모든 부분에 밝은 햇빛이 비치고 맑은 공기가 흐르는 환경도시가 되었다. 도시가 고층건물로 위압적이지도 않으며, 걷기 좋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며, 공공공간이 풍부한, 건축물 중심이 아닌 인간적 척도에 맞춰진 인간적 도시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 살아가기에 효율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도시계획 플랫폼이 바르셀로나 도시의 운명을 바꾸었다. 만약,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기초도 모르는 로비라의 건축설계에 따라 바르셀로나가 만들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매력적인 바르셀로나는 없고, 후진국의 도시처럼 소수의 부자층과 다수의 슬럼으로 구성된 사람 살기 힘든 끔찍한 바르셀로나가 되었을 것이다.

세르다가 계획한 도시 플랫폼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도시 플랫폼 위에 지중해풍 라이프스타일과 맛있는 음식과 예술적인 건축물이 놓이면서, 바르셀로나는 변방의 시골 도시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도시는 그러한 플랫폼이고, 도시계획은 그러한 도시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한다.

전략이 필요한 시대



「TSMC와 트럼프 이펙트: 대격변 예고」

콜리 황 지음 | 경이로움

이 책은?

트럼프 2.0시대 속 반도체 패권 전쟁
반도체의 미래를 통해 21세기를 살핀다

대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된 TSMC의 행보를 통해 반도체가 지정학의 핵심 무기가 된 트럼프 2.0시대를 짚어본다. 40년 경력의 글로벌 ICT 산업 분석가이자 디지털임즈의 대표인 저자는 21세기 석유라 불리는 반도체 기술이 AI, 데이터, 국방, 경제, 산업 등 인류 문명의 심장부로 자리 잡은 현 시대에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한가운데에 있는 TSMC의 움직임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양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움직임을 조망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게임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반도체의 미래를 결정할 몇 가지 규칙

- TSMC의 전략적 위치: TSMC는 기술, 경제, 안보 기술 패권의 주축이 되었다
-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리쇼어링, 칩스법 등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재편되는 중이다
- AI 시대의 반도체: 격동하는 AI 경쟁으로 반도체는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핵심이 되었다
- 대만과 한국: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 2030 반도체 산업 전망: 양자, 드론, 우주항공, AI 기술 모두 반도체가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

한 해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나무가 초록을 내어 더위를 준비하듯이
나라 안팎으로 예정된 혼란의 분기점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랜드 퀘스트 10」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지음 | 지식노마드

이 책은?

다음 10년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
기술과 산업의 새 질서를 주도할 최초의 질문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며 선진국들을 추격했다. 이제 21세기에는 누군가를 쫓는 것이 아닌,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인 시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히 기술 선도국이 되어 기술과 산업의 새질서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21인의 석학이 스스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념을 축적해 나가기 위한 통찰을 담은 질문을 던진다. 10개의 핵심 분야에서 향후 10년 안에 해결된다면 세상을 뒤흔들 질문을 도출한 후 그에 대한 접근의 실마리까지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세상을 뒤흔들 10개의 질문

- 역노화 기술을 이용해 인간은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 온실가스를 원료로 활용하여 미생물 세포 공장을 통해 현재의 석유화학 공정보다 더 경쟁력 있게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을까?
- 태양 빛을 전기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60%인 태양전지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 미래에 나타날 신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
- 기존의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벗어나 사람의 뇌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 나노 스케일을 넘어 웅스트롬 시대를 열어갈 반도체의 핵심 소재와 소자는 무엇인가?
- 실리콘 기반 기술의 근본적 한계를 돌파하면서 기존의 반도체 플랫폼과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을까?
- 공간 디스플레이는 현실과 화면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까?
- 가상현실보다 향상된 뇌내 현실을 실현할 수 있을까?
- 일반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



www.bojo.go.kr

✓ e나라도움이란?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구축 목적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수급 자격과 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정보공개

필요한 보조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추진 경과

2014

e나라도움 구축 결정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e나라도움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추진단 설치 등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치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e나라도움 구축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

e나라도움 구축, 운영 근거 마련

•2016년 12월
e나라도움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2017.1.4. 공포)

2017

e나라도움 전면 개통

•2017년 7월
보조금 정산, 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2017년 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이 1차 개통하였습니다.



사업수행 단계별 변화된 모습

구분	e나라도움 도입 전	e나라도움 도입 후
① 사업공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회원가입 → 공모게시물 검색 •모든 국고보조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검색 가능
② 사업신청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제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행정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선정 통보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검색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④ 보조금교부 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신청서, 보조금통장사본, 서약서 등을 제출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행정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⑤ 보조금교부 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서류 구비여부, 자부담금 예치 확인 및 교부조건 부여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교부결정 여부 실시간 검색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⑥ 보조금 교부	사업담당자는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 후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으로 국고보조금 이체	교부금액 확인(예탁기관 계좌) •보조금 목적 외의 오유용 사용 원천 방지
⑦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는 매 지출 때마다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등의 결재 후 지출처리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직접 작성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와 연계된 지출내역 등록 •실집행 기반의 사업별, 재원별 구분관리 및 자동정산
⑧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등을 반납 → 3~4주 소요	실적보고서 등 온라인 작성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에 3~4주 소요 → 대폭 단축·간소화



기대효과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
보조사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낭비 방지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졌습니다.



스마트 행정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되었습니다.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감사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 양 기관의 재정·감사 역량 강화와 교육분야 협력 추진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감사교육원(원장 김순식)과 양 기관의 재정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산회계 분야 교육 상호지원, 교육과정 자문, 인프라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본 업무협약에 따라 감사교육원에서는 dBrain+ 교육을 통한 감사(監査) 영역에서의 재정 전문성 제고를, 재정원에서는 감사·회계 교육을 통한 투명한 기관 운영 역량 강화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원 윤석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정원의 예산회계시스템 활용 교육을 감사원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정 감사역량 확충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정 시스템 발전을 위해 "감사교육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원은 대전·광주·대구·강릉·부산 지역에서 재정도움센터를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국고보조사업자는 누구나 dBrain+와 e나라도움 사용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비롯해 45개 기관(전체 평가 대상 중 5.7%)만이 '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4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43개 정량지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8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주요 개인정보 정책 이행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강화된 평가 기준 속에서도 임직원의 보안 의식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윤석호 원장은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국가재정 전문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세입에서 지출한 세출을 뺀 다음,
작년 예산에서 올해로 이월한 금액을 제외한 것은?

- ① 총세입부 ② 총세출부
- ③ 세입세출실적 ④ 세계잉여금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힌트



응모



좌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5.26. ~ 6.15.



» 지난호 정답 : FIS재정분석교육센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6999 010-****-3882 010-****-3043
 010-****-5690 010-****-4588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미륵사지 출토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개관 5주년 기념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Tue
-
2025.5.25.Sun

국립역산박물관 기획전시실



Decorative Ridge-End Tiles (Chimi) Excavated from the Mireuksa Temple Site:
Documenting Their Production, Disuse, and Restoration

국립역산박물관
IKSAN NATIONAL MUSEUM



이·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1.1.~12.31.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만 19세 이상, 복지로)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www.129.go.kr)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